■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의무화', 현장에선…

대다수 주민 "그게 뭔데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지난해말부터 의무적 시행

유색 페트병·일반 플라스틱류 구분없이 혼합 배출 비일비재

"주민 적극 동참 필요" 목소리

유색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 등이 뒤섞여 있는 비닐봉지. 강다혜기자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의무화됐지만 대다수 시민이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일부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현장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제도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다.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들은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투명 페트병 수거함'을 설치해 '유색 페트병·일반 플라스틱' 수거함과 별도로 분리해 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 주민들은 음료·생수 페트병을 비우고 헹군 뒤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트려 뚜껑을 닫은 후 전용 수거함에 버리는 것이 원칙이다.

제주시내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은 총 58개소(지난해 12월 25일 기준)이며, 현재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지 않은 3개소를 제외한 55개소에 '투명 페트병 수거함'이 비치돼 분리배출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아파트 단지들에선 주민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분리 수거함이 여태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라벨 제거작업 등 별도의 일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지난 15일 제주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 클린하우스. 투명 페트병 수거함이 별도로 마련돼 있었지만 수거함 내부엔 라벨이 붙은 투명 페트병이 뒤섞여 있다. 수거함 밖에 투명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류가 뒤섞여 버려진 비닐들도 다수 목격됐다.

제주시내 또다른 아파트단지의 클린하우스엔 분리 수거함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채 유색 플라스틱류, 투명 페트병 등이 마구 섞여 버려져 있을 뿐 아니라 분리배출제도에 대한 안내문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 주민들은 제도 시행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김모(57·여·제주시 아라동)씨는 "아파트 관계자로부터 투명 페트병을 따로 배출해야 한다는 안내도 받지 못했고, 제도 시행 자체도 몰랐다"고 말했다.

주민들에게 제도가 안내됐지만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분리배출이 정착되지 않아 아파트 관리인이 별도의 분리 작업을 거쳐야 하는 공동주택도 있었다.

제주시내 한 아파트 단지 관리인은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트리는 등 제도에 관한 안내문을 엘리베이터 등에 부착했지만, 숙지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지 않아 별도의 작업을 거쳐야 해서 일손이 많이 간다"고 토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에 전용 마대를 배포하고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분리배출 의무화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2월 25일부터는 공동주택 뿐 아니라 단독주택과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의무화된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유채꽃과 한라산 만설 16일 서귀포시 예례동 해안에서 바라본 한라산 만설이 유채꽃과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형 사회서비스원' 설립 박차

도, 의회·학계·전문가와 민관협의체 구성

제주특별자치도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에 따른 '제주형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발전방안 모색에 나선다.

제주도는 최근 도의원과 학계, 민간기관·단체, 복지전문가 등 10명으로 꾸린 '제주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민관협의체는 이달 중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까지 '제주형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도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정일을 하반기(7월)로 잡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올해 설립 가지정 통보를 받았고, 제주도의회에서는 출연동의안(출연액 21억6000만원)이 의결됐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과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운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민관협력 지원사업,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1본부(5팀) 20명으로 구성,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제주시, 작년 세무조사로 36억여원 추징

제주시는 숨은 세원 발굴과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365건에 36억6100만원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세무조사는 10억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정기조사와 함께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조사, 창업 중소기업·농업법인 등의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졌다.

분야별 지방세 추징액은 ▷법인 과소신고 79건·6억7600만원 ▷과점주주 미신고 130건·6억5000만원 ▷고급오락장·별장·고급주택 등 중과세 20건·9억8900만원이다.

또 ▷농어업법인이나 자경농민으로 감면받은 후 매각이나 다른용도 사용 88건·7억9200만원 ▷창업중소기업·임대주택으로 감면받은 후 매각이나 다른용도 사용 23건·2억6900만원 ▷박물관으로 감면받은 후 해당 용도 미사용 1건·2억4900만원 ▷기타 24건·3600만원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학생건강증진추진단' 첫 행보

올해 초중고 심리치료비 지원사업 추진키로

공무원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수장 자리가 바뀐 '제주학생건강증진추진단'이 첫 행보에 나섰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학생 심리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제주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사수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학생 심리치료비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찰을 통해 지속 진료가 요구되는 초·중·고 재학생이며,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학생 1인당 연 5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까지이며, 신청일부터 발생된 치료비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이와 관련 지난해 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을 통해 601명의 학생들이 심리치료비 약 2억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학생 심리치료비는 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추진단 홈페이지(http://www.jje.go.kr/health/index.jje) '치료비 신청'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사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심리치료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학생건강증진추진단(064-710-004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중대재해법에 학교장 제외"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촉구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시 학교장을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는 지난 14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제76회 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 촉구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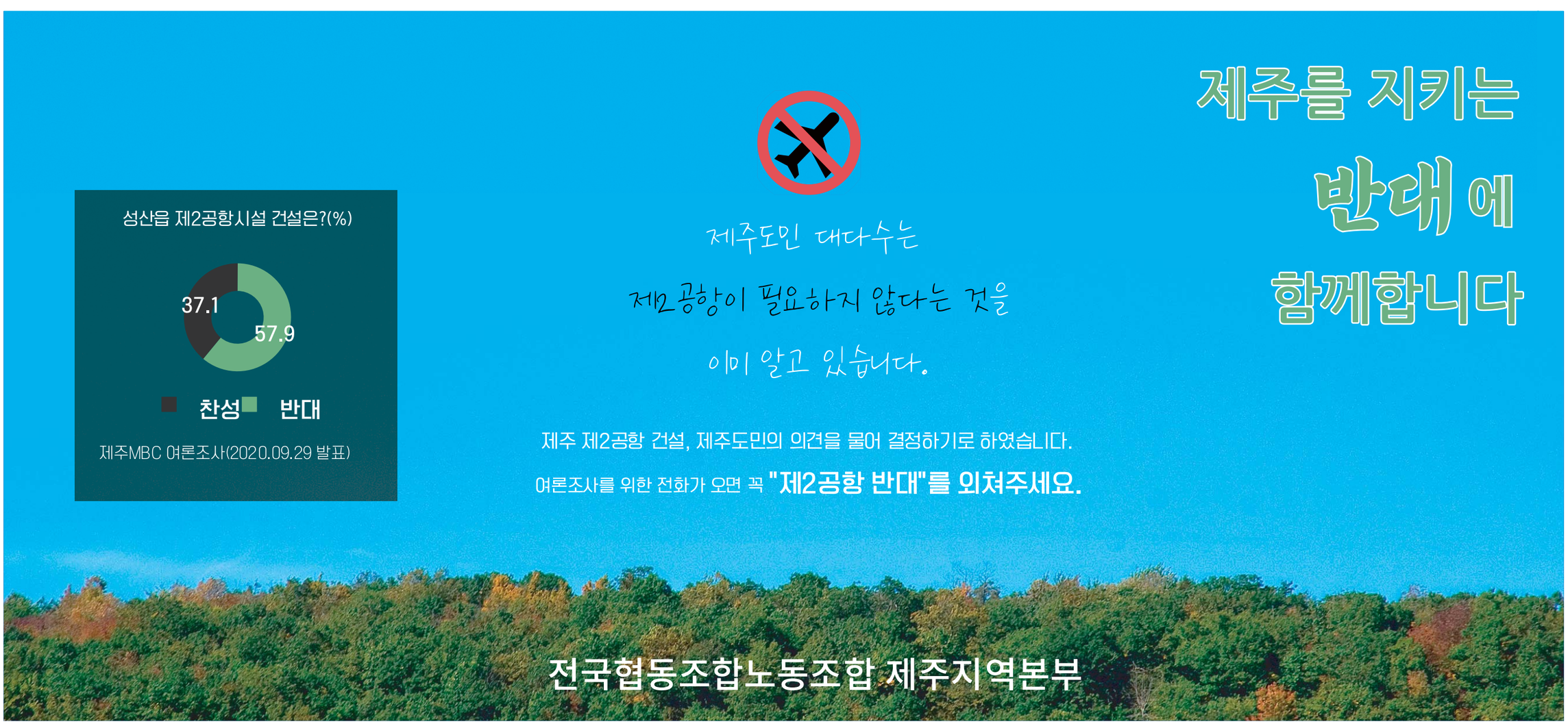
협의회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을 적용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된다. 학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송은범기자

가금산물 반입금지 일부 해제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부터 충남·충북지역 일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미 발생 시·군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한다.

충청남도는 당진·서산·태안·보령·부여·서천 6개 시·군, 충청북도는 충주·제천·담양 3개 시·군으로 해당지역에서 생산, 도축, 가공된 가금산물에 대해서만 반입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경기·전남·전북·경북·경남 지역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시 발생지역과 역학사항 등을 고려해 해당 도 전 지역의 가금산물을 반입 금지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지역은 장기간 반입금지에 따른 가금산물 부족 및 병아리 생산 감소로 농장 및 관련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태윤기자